

## 북핵해결 동북아·세계평화에 도움

한·스웨덴 정상회담... 첨단과학·환경분야 등 상호협력 제고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함께 하고,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유지에도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한·스웨덴 양국 정상은 수교 45주년을 맞아 성숙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와 지역정세를 비롯한 양국관계 증진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페르손 총리는 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변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고, 노 대통령은 스웨덴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기여를 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페르손 총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스웨덴의 6자회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

장을 밝히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화와 접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무역과 투자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관계 증진에 만족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in Sweden Agency'와 'Invest Korea' 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환경, 교통안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 주요 국

제기구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아시아와 유럽간 관계증진의 중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틀 내에서의 협력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 개최 성과와 관련, "페르손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스웨덴 양국간 실질협력 및 사회문화정책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 정상간의 개인적 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평화, 인권, 개도국 원조분야에서의 선도국가인 스웨덴과의 전반적인 협력증진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 대덕 R&D특구 추진

추진단 발족·육성책 마련

한국 최고의 지식집적지로 성장한 대덕연구단지 R&D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룡)와 함께 '대덕 R&D특구 지정과 육성'을 주제로 하는 42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대전시장을 공동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덕 R&D특구 추진단'이 출범했다.

대덕 R&D특구 추진은 지난 73년 지정돼 교육·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주로 입주한 대덕연구단지에 첨단 생산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특구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R&D특구 육성방안이 보고돼 대덕을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 폭설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

충청·경북·대전 등 10개 시도, 77개 시군구 지원 확대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포함한 폭설피해 신속대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10일 충남, 충북, 경북, 대전, 전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폭설피해를 본 10개 시·도, 77개 시·군·구가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이날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폭설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금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면 통상적인 지원

기준에 의한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용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복구비도 피해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태풍과 호우의 공공시설 피해위주로 책정돼 있는 현행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도 설해 등 차별화된 재해유형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피해발생 5일만에 이뤄져 2002년 태풍 루사(17일), 2003년 태풍 매미(10일) 때보다 훨씬 빨랐다.

# 변협·민변 “탄핵사유 법리적 근거 부족”

터무니없는 이유 내세워 수적 우위 무기로 밀어붙이는 정략적 의도 명백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9일 대표적 법률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의 성명은 거대 야권이 제시한 탄핵사유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이들 성명을 보면 ‘사유가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더욱 명백해진다. 두 단체의 성명서를 요약해 실는다.

## ▶ 대한변협

### 답변발언·측근비리 탄핵사유 안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정지, 파면이라는 충격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사유는 이들 충격상황을 무색케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대통령의 TV토론 답변발언과 측근비리는 탄핵사유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측근비리의 문제는 대통령 재임 중의 법률위반이 아니어서 탄핵사유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

된 대통령이 그만한 일을 가지고 파면된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사유로 삼기에는 너무도 작아 보인다.

## ▶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 경제파탄 ‘증명도 사유도’ 안돼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및 헌법상 보장된 재직 중 형사소추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탄핵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 “탄핵·추방대상은 오히려 대다수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9일에 이어 10일 성명서와 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부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 문제가 탄핵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정계에서 영구히 추방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15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이다.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 않고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묻고 싶다.

## 잇따르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정치권이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또 다른 형태의 헌정파괴이다. 대통령은 중앙선거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성명서 기자회견 발언 등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박탈은 물론 정계에서 영구히 추방돼야 할 것이다.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가 임기 마지막에 탄핵을 추진할 자격조차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성명서 민생현안과 정치개혁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국가가 대통령 탄핵으로 공조한다는 것은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선거 전략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 여성단체연합 성명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점점 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등 돌리게 하는 원흉이 바로 16대 국회이다. 온갖 부정부패와 정쟁을 일삼아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 녹색연합 성명서 국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중대한 선거법 처리를 연기하고, 구태의연한 공전에 매달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인 탄핵이 오히려 시급하다.

# ‘정략적 발의’ 있어도 ‘정략적 방치’ 없다

일부 신문, 선거정략에 갇혀 ‘득표 유불리·야당 자멸전략’ 등 엉뚱한 추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정략적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다룬 10일자 일부 신문 사설은 정치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수준에 딱 갇혔다.

그런 까닭에 동아일보의 표현대로 ‘정략 위주의 나쁜 정치를 펼치는 곳’과 의연하게 원칙대응하는 곳을 전혀 구별 않는 무책임한 논평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사안의 옳고 그름, 잘못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양비론은,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따지는 언론의 울골은 사명에 역행한다.

청와대는 거대 야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고 정략적이기 때문에 원칙대응을 선언했다. 국회 다수당인 야권의 정략에 맞불을 놓기 위해 또 다른 정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밝힌 대로 야당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무다.

이런 원칙에 맞게 대처할 뿐 그 어떤 노림수나 정치적 셈법이나 뒷거래는 없다. 탄핵 발의 결과를 의연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의

## ‘총선우물’에 빠진 신문사설

로 시종여일하고 있을 뿐이다.

언론이 정치계입, 정치술수, 전술과 정략의 틀거리로 탄핵정국을 재단하고 청와대의 입장을 평가하는 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단시론(單是論)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야당의 뻔한 총선용 정치공세를 비판하면서 청와대까지 도매금으로 동류 취급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

게다가 대뜸 청와대가 야당과 오기싸움을 벌이며 사태를 일부터 방치하거나 야당의 자멸을 노리고 있다는 사설의 지적은 엉뚱하기 짝이없다. 사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정략에 스스로 갇혀 좌정관천(坐井觀天)하는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통령의 상식 밖의 고집스런 버티기는, 야당의 탄핵발의가 불법 대선자금의 오명을 짊어진 채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가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듯이 비쳐 총선에 불리할 게 없다고 계산한 결과 △국

정의 만사(萬事)를 오로지 총선전략의 도구로 만드는 대통령과 어리석게도 번번이 충동적으로 휘말려드는 야당이 벌이는 끝없는 행패(이상 조선).

조선은 사설제목마저 ‘대통령과 야당의 총선 인질 탄핵 도박’으로 달아 양비론이 다다를 수 있는 정점을 보여줬다.

다른 신문 사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정국은 각 정치집단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동아) △여차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할 것을 예상해 야당이 자멸하도록 하겠다는 전략(국민) △여야와 청와대가 갈 데까지 가 보지는 오기싸움의 근저에는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한국).

신문의 공식견해를 밝히는 사설에서 이처럼 엉뚱한 추단을 내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탄핵정국에서 야당의 정략적 탄핵은 있을지언정 청와대의 정략적 방치는 있을 수 없다.

# YS·DJ도 언급...10년간 공론없이 정쟁 되풀이

야당은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반발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선관위 결정은 존중하나 선진 민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우리도 이에 걸맞게 제도와 관행을 바꿔보자”는 제안에 대해 야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과국행위”라고 둔갑시켜 놓고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집권했던 시절 무엇을 주장했는지 돌이켜 보면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정략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지난 95년 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두 돌 기자간담회에서 96년에 실시될 15대 총선에서 직접 지원유세에 나서겠다는

## 선거지원 논란 예나 지금이나

뜻을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은 ‘대통령의 선진정치 의지’라고 추켜세우며 이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까지 추진했다.

그 때 내세웠던 논리가 미국 등 선진국 상황과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거지원 유세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법규정 미비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당활동인 선거지원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당시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지원은 위법’이라고 하자 “법을 고치면 될 게 아니냐”고 반박까지 했다. 정작 헌법기관에 대해 위협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을 드러냈던

정치집단이 바로 지금의 야당이다.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는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다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무총장도 대통령 선거중립 시비에 대해 여당 총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근 10여년 전부터 제기돼온 대통령의 합법적인 정치활동 범위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지 않고 선거 때마다 소모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두 사례는 거대 야권이 정략적인 탄핵 추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